

의안번호	제 3 호	의 결 사 항
보 고 연 월 일	2026. 9. 30. (제 13 회)	

대체불가 R&D 추진을 위한
혁신기반 강화 방안(안)
- LAND for 7 SEED -

과 학 기 술 관 계 장 관 회 의

제 출 자	재 정 경 제 부 장 관 이형일	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 장 관 배경훈
	교 육 부 장 관 최교진	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최취영
	농 립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송미령	산 업 통 상 부 장 관 김정관
	보 건 복 지 부 장 관 정은경	기 후 에 너 지 환 경 부 장 관 김성환
	국 토 교 통 부 장 관 홍지선	해 양 수 산 부 장 관 황종우
	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이소영	
제출 연월일	2026. 9. 30.	

대체불가 R&D 추진을 위한 혁신기반 강화 방안(안) [요약]

I. 의결주문

- 「대체불가 R&D 추진을 위한 혁신기반 강화 방안(안)」을 별지와 같이 의결함

II. 제안이유

- 3대 메가 프로젝트, 7대 SEED 등 대폭 확대된 R&D 투자가 우리 R&D 체질 강화 및 생태계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, 관계부처가 함께 혁신기반 강화를 위한 중점과제를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

III. 주요 내용

- 이하 요약 자료로 갈음함

대체불가 R&D 추진을 위한 혁신기반 강화 방안(안)(요약)

— LAND for 7 SEED —

☞ 3대 메가, 7대 SEED 등 대폭 확대된 투자가 R&D 생태계의 활력으로 이어지도록, 혁신본부와 R&D 주요 수행부처(11개*)가 함께 혁신기반 강화를 위한 중점과제 도출

* 재경, 과기, 교육, 산업, 기후, 중기, 복지, 농림, 국토, 해수, 문화

<국민주권정부 과학기술혁신전략 간 연계>

「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」
(’25.11. 대통령 주재 대국민 보고회)

■ 폭넓은 연구현장 소통 기반,
연구몰입·제도개선 과제 도출

「제6차 과학기술기본계획」
(’26.6. 과기자문회의)

■ 국민주권정부 5년간의
범부처 혁신정책 기본방향 수립

「대체불가 R&D 혁신기반 강화방안」
(’26.9. 과기장관회의)

■ 부처협업(혁신+11개 부처) 본격화,
7대 SEED 등 성과창출 위한 핵심과제 추진

I. 추진 배경 : R&D 체질 강화로 연구개발 투자가 열매 맺는 토대 마련(LAND)

- (추진방향) 7대 SEED 등 성과창출 가속화 및 연구생태계 활력을 위해 연구자의 자율성은 최대한으로 보장, 수행부처의 관리 책임성은 최대한 제고
- (비전) ①(Leading Portfolio) 정부R&D가 적재적소에 과감히·전략적 투자
②(Assessment) 평가·환류 제고를 통한 예산투입 성과 극대화
③(Next University R&D) 대학 연구생태계 역량 축적
④(Diffusion & Delivery) 성과가 기업·민생까지 파급

→ 관계부처 협업·중점과제간 연계를 통해 R&D 혁신기반 지속 고도화

- (추진경과) 과기정책 총괄기관인 혁신본부와 R&D 수행부처·전문기관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중점과제 발굴·추진

※ 안건 이후에도 지속 협력하여 과제 이행점검 및 R&D 예산·제도 소통 강화

<안건수립체계 : “대체불가 R&D 혁신 TF” 운영>



II. 4대 중점과제

(1) 정부R&D 투자전략 포트폴리오(주관 : 혁신본부)

□ 5개년 투자전략 중심 전략성·부처협업 강화

- (포트폴리오 중심 투자) ‘국가R&D 중장기 투자전략(’26-’30)’을 중심으로 5년간 200조원 이상 과감한 투자
 - 핵심분야별 국가미션·성과목표·연도별 마일스톤 중심의 배분·환류 추진
- (미래기술 투자시스템 개선) 3대 메가, 7대 SEED 등 핵심분야 투자는 초기 단계부터 시장 진출을 고려한 실증, 스케일업, 사업화(금융·조달 등) 연계
- (다부처 협업 촉진) 범부처 협업사업 지정, 단일 사업단·협업체 구성 등 실질적 협업체계 구성, 예산 심의 단계에서도 사실상 단일 사업으로 간주

□ 대형(1,000억원 이상) 연구형 R&D 기획·컨설팅 강화

- (사전검토 확대·구체화) 대형 R&D의 적시성 및 기획 완성도 제고를 위해 점검 대상 확대*, 기술적 구현 가능성 및 파급효과 등 종합 검토
 - * 27년 신규 중 총사업비 추가검토사업, 자문회의 예산 배분·조정 이후 반영된 사업 등
 - ※ 과기자문회의 전문위 + 부처별 대형사업 수행 경력자 + 전문기관 PM 등 참여

(2) 성과창출형 평가체계(주관 : 혁신본부)

※ 「연구성과평가법」 개정(~’26)

□ R&D 통합사업평가단 운영 : 행정부담 완화, 평가 전문성 강화

- (통합평가 도입) ^{부처}지체평가-^{혁신본부}상위평가 이원화 체계를 단일 통합평가로 전환
 - ※ 관계부처 기존자료, IRIS-NTIS 등록자료 등 활용, 실제 작성할 자료 최소화
 - 3년 주기로 사업군별 성과평가 + (1~2년차) ‘후속조치 이행점검’ 추진
 - 통합평가단 운영시 분과구성, 위원추천 등에 전문성 및 평가 공정성 담보
 - ※ 세부 소분과 운영, 부처·학회 추천(60% 이상) 및 재정전문가 참여, 교차평가제 등 적용

□ 사업평가 지표 개선 : 정성·절대평가 중심 전환

- 사업유형과 연차 고려, 대표성과(5건 이내) 등 핵심 평가지표를 최소한으로 설계

□ 평가결과 환류 강화 : 예산 배분·사업 개선

- (평가 결과) 평가등급 세분화(3등급 → 5등급)와 함께, 사업별 개선방향 의견 도출
- (예산 환류)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및 차년도 예산반영 실질화

(3) 대학 일류R&D 체질 개선(주관 : 과기정통부·교육부)

- **연구중심대학 도약**을 위한 **블록펀딩** 지원('27년 신규사업) 및 **법적 토대** 마련
 - **(기반구축형 블록펀딩)** 과기정통부·교육부 역할분담 및 공동추진
 - 교원 - 전임연구원 - Staff-Scientist - 기획·지원인력 등 선진국형 협업 구조 전환을 위해 인력·장비 등 연구기반 구축 지원('27년^{정부안} 120억원)
 - 기초학문·인문사회 분야 연구기반 및 대학원생 등의 연구공백 완화('27년^{정부안} 300억원)
 - **(법적 토대)** 「기초연구진흥법」, 「고등교육법」 內 지원 근거 마련
- 대학 **연구시설·장비 공동활용** 촉진
 - 공동기기원 중심 통합 지원체계 및 지역거점 대학의 인프라 개방 추진, 유휴장비 활용 제고(현장 전수조사 등)

(4) 민간 성과확산 고속도로(주관 : 산업부·중기부)

- **범부처 사업화·확산 패스트트랙** 도입
 - **(범부처 상설협의체)** 기술사업화 R&D 관련 부처가 함께 연구성과 이관, 역할분담, 구매처 확보 및 협업 사업 공동기획 등 논의
 - **(사업화 R&D 성과기준 명확화)** 시장수요 지속성, 최종 산출물 계획 등 Market-Pull 중심 표준 KPI 도입 추진, 경쟁형 단계평가 R&D 확대
- 시장가치를 반영한 **‘돈이 되는 R&D’** 기획
 - 과제선정 단계부터 시제품 개발시점, 시장경쟁력 등 기술성숙도 검증 강화, 생산·납품이 명확한 과제는 실증·인증비용 패키지 지원
- 기술사업화 **성과 교류·환류** 강화
 - **(기술거래 플랫폼)** 부처별 개별 플랫폼의 데이터 체계를 연동, 국가 기술거래, AI 기반 공급-수요 매칭 및 추천 강화
 - **(권역별 Tech-hub)** 4극 3특 권역별 기술사업화 총괄기관을 지정, 지역기관 네트워크 및 산업기술마스터를 활용한 사업화 병목 해결
- 혁신본부 등기업 R&D성과 회수·재투자를 위한 **투자형 R&D** 본격 도입
 - 법적 근거 및 관리체계 마련(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, 매뉴얼 수립 등), 관련 R&D사업 확대 및 후속지원을 위한 협업체계 운영 검토
- 재경부 등혁신기술 촉진을 위한 **국가계약체계 개편** 추진(개발-구매 연계형 R&D)

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		
회	차	2026 - 9 (3호)

대체불가 R&D 추진을 위한 혁신기반 강화 방안[안]

- LAND for 7 SEED -

2026. 9. 30.



관계부처 합동

순 서

I. 추진 배경	1
II. 4대 중점과제	4
<1> 정부R&D 투자전략 포트폴리오	5
<2> 성과창출형 평가체계	7
<3> 대학 일류R&D 체질 개선	10
<4> 민간 성과확산 고속도로	12
III. 주요 실행계획	15
참고1. 제2차 국가R&D 중장기 투자전략('26-'30) 주요 목표	16
참고2. R&D 평가체계 흐름 및 개선방향	18

I. 추진 배경

□ 국내외 동향



**“문명사적 대전환과 국제질서의 대격변 앞에서,
세계가 꼭 필요로 하는 나라, 모든 나라가 협력하고 싶은 나라,
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해”**

- 이재명 대통령 2026 광복절 경축사 -

- 국민주권정부의 ‘대체불가 대한민국’은 곧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하는 독보적 기술 및 이를 뒷받침하는 **첨단과학 생태계 확보**와 직결

※ '26년의 높은 경제성장률('26.1분기 1.7% ↑ / OECD 회원국 중 1위)은 반도체 등 첨단 과학기술에 기반

- 특히, **7대 SEED*** 등에 경제·사회 패러다임을 바꿀 첨단 연구성과를 창출, 산업·민생까지 연계시켜 **대체불가한 국가자산**으로 만들 필요

* **SMR, 핵융합, 한계돌파형 재생에너지, 양자, 우주항공, 첨단바이오, 첨단공급망**(광물·소부장)

- 이는 미래기술의 선정·육성(What to do)은 물론, ‘정부R&D의 철학과 성과창출을 뒷받침하는 효과적 파이프라인’(How to do)이 뒷받침될 때 가능

※ 美 ‘Science, a New Golden Age’, 日 ‘통합이노베이션전략’ 등 주요국도 국가 최상위 과학기술 전략에서 연구자 연구몰입 강화, R&D성과 민간확산 가속화 등을 강조

□ 국민주권정부의 과학기술혁신정책 추진 경과

- 우리 연구생태계에 대한 우수성·자부심을 토대로, 2년간 R&D 예산을 **33% 증액**(’25년 29.7 → ’26년 35.5 → ’27년(안) 39.5조원)

- 연구현장의 자율·협업·신뢰를 중심으로 ‘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’(’25.11.) 및 ‘제6차 과학기술기본계획’(’26-’30)’ 수립

- R&D 예타 폐지(과기기본법·국가재정법), 연구과제 평가등급제 폐지(연구개발 혁신법), 「지역주도 과기혁신법」·「연구데이터법」 제정 등 주요과제 법제화

- 출연연 PBS 폐지 및 기초연구 생태계 완전 복원도 ’26년부터 본격화

□ **혁신기반 강화 방향 : R&D 체질 강화로 연구개발 투자가 열매 맺는 토대(LAND)**

- **(추진방향)** 7대 SEED 등 성과창출 가속화 및 연구생태계 활력을 위해 연구자의 자율성은 최대한으로 보장, 수행부처의 관리 책임성은 최대한 제고

- 특히 R&D 전달체계의 경우 3대 수행주체* 중 혁신과제가 도입된 출연연(PBS 폐지), 기업(투자형 R&D)에 이은 대학R&D 체질 개선에 중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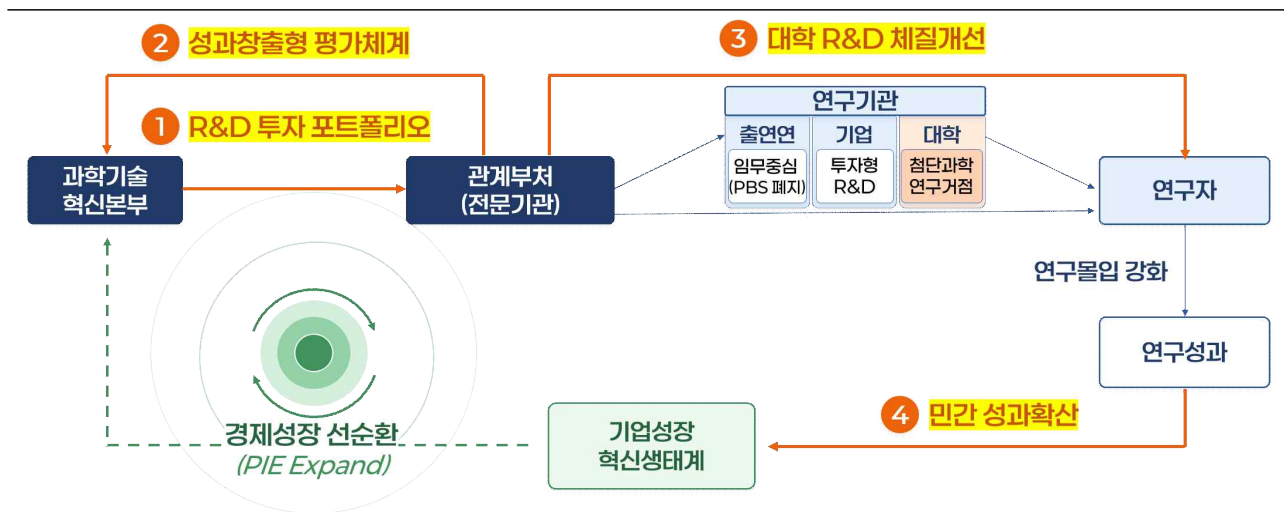
* 정부R&D 집행비율('24) : 출연·직할연(39.4%) > 기업(26.5%) > **대학(22.6%)**

(202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·분석)

- **(비전)** ① **(Leading Portfolio)** 정부R&D가 적재적소에 과감히·전략적 투자
② **(Assessment)** 평가·환류 제고를 통한 예산투입 성과 극대화
③ **(Next University R&D)** 대학 연구생태계 역량 축적
④ **(Diffusion & Delivery)** 성과가 기업·민생까지 파급

→ 관계부처 협업·중점과제간 연계를 통해 R&D 혁신기반 지속 고도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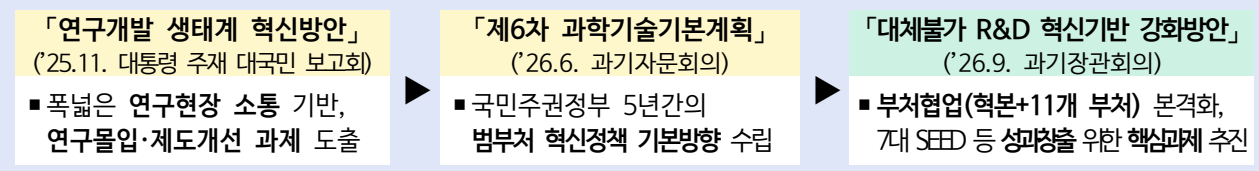
<대체불가 R&D 혁신기반 개요>



☞ **3대 메가, 7대 SEED 등 대폭 확대된 투자가 R&D 생태계의 활력**으로 이어지도록, **혁신본부와 R&D 주요 수행부처(11개)***가 함께 **혁신기반 강화**를 위한 중점과제 도출

* 재경, 과기, 교육, 산업, 기후, 중기, 복지, 농림, 국토, 해수, 문화

<국민주권정부 과학기술혁신전략 간 연계>



□ 수립 및 추진체계

- **(전략수립)** 과기정책 총괄기관인 혁신본부와 R&D 수행부처·전문기관간 협업
→ 범부처 TF 및 수행부처 주관 실무분과를 운영하여 중점과제 발굴 추진
- **(이행점검)** 안건 수립 이후에도 혁신본부·R&D 수행부처간 지속 협력하여, R&D 체질강화를 위한 중점과제 이행 점검 및 예산·제도 현장소통 강화

<대체불가 R&D 혁신 TF 운영>



□ 중점과제 및 주안점

① (투자) 정부R&D의 양적 확대를 뒷받침할 투자시스템 혁신 방안은?

- 연 39.5조원('27년 정부안 기준)의 R&D가 현장에 파급·안착되도록 예측가능한 R&D 포트폴리오 운영 및 투자 시스템 내실화

② (평가) 행정부담 완화·우수성과 환류를 평가제도 전반에 확산시킬 방안은?

- 도전적 연구 장려 및 실패의 자산화를 위한 과제평가 개선에 이어, 관계부처 대상 R&D 사업평가의 통합평가 전환으로 파급력 있는 우수성과 창출 유도

③ (대학R&D) 우리 대학의 '연구기관' 전환을 위한 지원 고도화 방안은?

- 대학이 과제 수행자(performer)를 넘어 연구 기획, 인력 육성·재생산, 인프라 축적·운영을 스스로 담당하는 연구기관(institution) 진화 유도

④ (성과확산) '돈이 되는 R&D'를 위한 산업기술 사업화 혁신방안은?

- 민간R&D가 정부를 압도하고, 기초연구와 상용화가 상호작용하는 시대, 우수기술이 시장문턱을 넘어서도록 수요연계(Market-Pull) 본격화

대체불가 R&D 추진을 위한 혁신기반 강화 방안

- LAND for 7 SEED -

관계부처가 함께 R&D 생태계 활력 강화, 7대 SEED 토대 마련

4대 중점 과제

📖 예산 투자 & 평가 | R&D 예산 확대를 뒷받침하는 투자 효과성 극대화

1

Leading Portfolio

정부R&D
투자전략
포트폴리오



(1) '국가R&D 중장기 투자전략('26-'30)' 중심
미래기술 투자전략성 및 다부처 협업 강화

- 5년간 200조원 이상 투자, 마일스톤 중심 배분
- 3대 메가, 7대 SEED 등 핵심R&D 전주기 투자지원(실증, 금융, 조달 등)

(2) R&D 에타페지를 뒷받침하는 대형 연구형 R&D 기획·컨설팅 강화

2

Assessment

성과창출형
R&D사업
평가제도



현장 평가부담은 덜고, 평가결과는 환류되는 선순환을 위해,
과제평가 등급제 폐지에 이어 R&D 사업 통합평가 추진

- (1) R&D사업 통합평가단 : 행정부담 완화, 평가 전문성 강화
- (2) 평가지표 개선 : 정성·절대평가 중심 전환
- (3) 평가결과 환류 : 예산배분·사업개선 연계 강화



민간 전달 & 확산 | 대학은 연구역량 축적, 기업은 연구성과로 성장 가속화

3

Next University R&D

대학 일류R&D
체질개선



(1) 연구중심대학 도약을 위한 블록펀딩 지원('27년 신규)

- 첨단과학 연구역량 축적(협업형 인력구조) + 기초학문 기반 강화

(2) 연구기반 확충 지원 법적 토대 마련

(3) 대학 연구시설·장비 공동활용 촉진

4

Diffusion & Delivery

민간
성과확산
고속도로



(1) 범부처 사업화·확산 패스트트랙 도입

(2) 시장가치를 반영한 '돈이 되는 R&D' 기획

(3) 기술사업화 성과 교류·환류 강화(One-stop Tech-HUB)

(4) R&D성과 회수·재투자를 위한 '투자형 R&D' 본격 도입

(5) 혁신기술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체계 개편

<중점과제 1> 정부R&D 투자전략 포트폴리오 [주관 : 혁신본부]

중장기 투자전략을 R&D 예산 배분·조정과 연계해 전략성·예측가능성을 높이고,
예타 폐지 등 투자제도 개선의 관계부처·현장 조기 안착 지원

As-is		To-be
▶ 국가 차원 R&D 투자의 일관성 강조 ▶ 기술융합에 따른 부처간 협업 내실화 요구 ▶ 예타 폐지를 뒷받침하는 적시성·완성도 필요	→	▶ 5개년 투자전략 중심 전략성·부처협업 강화 - 5년간 200조원 투자, 마일스톤 중심 배분 - 3대 메가, 7대 SEED 등 핵심분야 시장진출 연계 ▶ 대형(1,000억원 이상) 연구형 R&D 기획·컨설팅 강화

(1) 5개년 투자전략 중심 전략성·부처협업 강화

- **(포트폴리오 중심 투자)** 단년도마다 목표가 변경되던 ‘근시안적 투자’ 탈피,
‘국가R&D 중장기 투자전략(’26-’30)’을 중심으로 전략과 투자를 강력히 연계
 - 5년간 200조원 이상 정부R&D 투자를 목표로, 핵심분야별 국가미션·성과목표·연도별 마일스톤 달성 중심의 배분·환류 추진 [분야별 세부목표 : 참고]

<R&D 투자 성과환류 체계(제2차 국가R&D 중장기 투자전략, ’26.8.)>

- ▶ (예산연계) 중장기 투자전략을 기반으로 ①R&D 중장기 재정운용계획(3월), ②차년도 투자방향(3월), ③예산배분·조정(6월) 실시
- ▶ (사업별 책임성 강화) 예산신청 단계부터 명확한 마일스톤 및 부처·사업간 역할분담 명시
- ▶ (Rolling Plan) 전년도 성과 및 당해연도 포함 ’30년까지의 계획을 수정·보완한 중장기 투자전략 시행계획 마련(3월)
- ▶ (성과확산) 연구결과(국가연구데이터) 공유 확산 → 후속연구·기술이전 연계

○ (미래기술 투자시스템 개선)

- ① (사업기획) 3대 메가, 7대 SEED 등 핵심분야 투자는 초기 단계부터 시장 진출을 고려하여 실증, 스케일업, 사업화(금융·조달 등)까지 연계
※ 시장수요, 기술안보 등을 고려, 3~5년내 상용화가 시급한 기술에 대한 심층 지원 강화

<7대 SEED 분야 예시 : 바이오 분야 투자 패키지>

연구개발 투자		금융		실증·조달
■ 후보물질 검증 ■ 비임상·임상(1/2상) 시험 R&D 비용 지원	+	■ SPC 설립 및 지분 참여를 통한 VC 유치 ■ 성과환류형 펀드* * 회수된 이익 R&D재투자	+	■ 대학·병원 중심의 임상 현장 테스트베드 ■ 신속 심사

- ② (예산배분) 신규사업 예산확대뿐 아니라 기존사업 고도화를 위한 사업계획·구조 변경(moving-target), 후속사업 사전기획 등 지원

- **(다부처 협업 촉진)** 현재 약 2조원(80개) 수준인 다부처 사업 내실화를 위해 기술분야간 융합촉진 및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
 - (융합촉진) 소관 부처가 다르더라도 범부처 차원에서 협업이 필요한 사업들은 혁신본부가 국가적 관점에서 ‘부처 간 협업사업’으로 지정
 - (관리체계 일원화) 부처공동 단일 사업단, 관계부처간 협의회 구성 등 사업관리·의사결정 전반에 실질적 협업체계 구성 유도
 - (예산심의) 개별 부처별·사업별 심의에서 사실상 단일 사업으로 간주하여 통합 심의 및 관리

(2) 대형 연구형 R&D 기획·컨설팅 강화

- **(검토대상 확대)** R&D 예타폐지 이후 1,000억원 이상 대형 R&D의 적시성 및 기획 완성도 제고를 위해 사전기획점검 대상 확대
 - ① '28년 신규 기획 사업뿐 아니라,
 - ② '27년 신규 반영 사업 중 총사업비 적정규모·사업기간 등 추가검토 대상*,
 - ③ 예산 배분·조정('26.6월) 이후 반영된 미검토 사업 등 포함

* 추가검토 대상 : 소관부처 사업계획 보완 제출 → 사업별 검토위원회에서 면밀히 점검
- **(점검사항 구체화)** 기술적 구현 가능성뿐만 아니라 사업의 파급효과, 사업규모·기간, 추진내역 등도 내실 있게 검토
 - 사업별 검토위원회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기술분야별 전문위원회 중심으로 부처별 대형사업 수행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, 전문기관 PM 등 폭넓게 참여
- **(제도개선 안착)** 연구형 R&D뿐 아니라, 구축형 R&D 전주기 심사체계 및 연구장비 심의 적시성 강화도 본격화
 - 연구장비 심의기준 완화(1억원 → 3억원) 및 신속심의 기간 대폭 단축(29일 → 16일) 현장 착근

〈중점과제2〉 성과창출형 평가체계 [주관 : 혁신본부]

연구자는 평가 대응 대신 연구 그 자체에,
부처는 반복적 평가 준비가 아닌 **사업 개선** 및 **‘파급력 높은 우수 성과 창출’**에 중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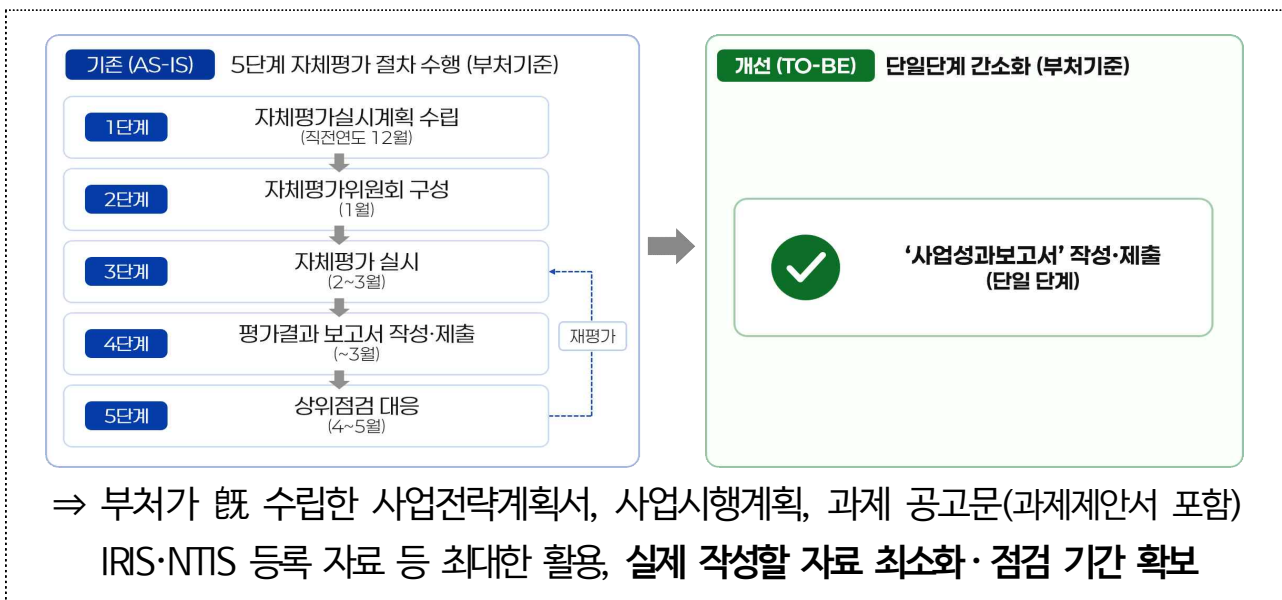
	As-is		To-be
평가 체계	· 각 부처(자체평가) + 혁신본부(상위점검) 이원화된 평가체계	▶	· 각 부처 사업성과보고서 제출 + 혁신본부 단일 평가체계
평가 대상	· 부처가 3년 주기로 소관 사업을 구분하여 자율 선정	▶	· 사업군별 3년 주기 전체 평가 + 既 평가 이행점검
평가 항목	· 목표 달성도 중심 정량적 평가	▶	· R&D 속성별(과학연구/기술개발) 질적 성과 중심 + 사업조정 방향 제시
위원 구성	· 과학기술분야 전문가 중심	▶	· 경제·재정·사회·정책 전문가 및 외부단체 추천 확대
거버넌스 (중립성·일관성)	· 부처 개별 자체평가위원회 구성·운영 + 혁신 상위점검위원회	▶	· 가칭 국가R&D사업 통합평가단 신설 (총괄·조정운영·분야별 분과)
결과 환류	· 3등급(우수/보통/미흡) · 평가결과-예산 연계 제한적, 시정조치 제재수단 부재	▶	· 5등급(S/A/B/C/D) + 사업개선·예산환류 의견 도출 병행 · 평가등급-예산심의 연계, 조치이행계획 수립 의무화

- ① **(평가체계)** 이원화된 평가체계를 혁신본부 단일평가체계로 전환하여, 부처의 행정부담과 연구자의 평가부담을 동시에 완화
- ② **(평가대상)** 부처별 평가대상 자율 선정 대신, 사업군별 3년 주기 전체평가와 평가결과 이행점검을 병행해 R&D사업 전반의 성과관리를 체계화
- ③ **(평가항목)** 목표달성도 위주 정량평가에서 벗어나 R&D 유형별(과학연구/기술개발 등) 성과의 질적 우수성 절대평가 강화, 대표성과 중심으로 행정부담 경감
- ④ **(위원구성)** 과학기술 전문가에 더해 경제·재정·사회·정책 전문가 및 외부단체 추천을 확대하여 평가의 전문성·공정성을 강화
- ⑤ **(거버넌스)** 가칭 국가R&D사업 통합평가단(총괄위·평가조정운영위·분과)을 신설해 평가주체를 일원화하고 특정 부처에 편중되지 않는 평가체계를 구축
- ⑥ **(결과환류)** 평가등급의 세분화 및 사업개선·예산환류 의견 도출로 평가결과 예산심의 연계 및 이행점검 강화, 환류 실효성 제고

(1) R&D사업 통합평가단 운영 : 행정부담 완화, 평가 전문성 강화

- **(체계 개편)** ^{부처} 자체평가-^{혁신본부}상위평가의 이원화 체계를 단일 통합평가로 전환
 - 각 부처는 사업별 성과보고서를 작성·제출하고 혁신본부가 ^{가칭}국가 R&D사업 통합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 절차를 간명화
- ※ 평가 대상 : 당해연도 신규사업, 정책지원사업, 국제분담금지원사업, 기관출연사업 등을 제외한 **전체 사업** ('27년 기준 900여개 예상)

<평가 절차 개선에 따른 행정경감(부처기준)>



- **(평가 주기)** R&D 사업 특성을 반영하여 3년 주기로 사업군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, 그 외 사업(1~2년차)은 ‘후속조치 이행점검’ 추진
- **(통합평가단 구성)** 총괄위원회, 운영위원회 및 사업별 특성을 고려한 분과* (총 120명 내외, 분과별 5~15명) 운영
 - * 분과 內 다양한 소분과를 구성해 면밀한 검토 강화
(예 : 기계소재 = 첨단소재·부품, 미래모빌리티, 로봇·기계·첨단제조, 산업·기업혁신 등)
- **(분과구성)** 기술개발형(AI·ICT, 양자·반도체 등) + 연구기반형(연구인프라, 국제협력 등)으로 나누어 사업별 특성 고려
- **(위원)** 사업·분야별 전문성 고려, 각 부처·학회 추천 위원을 60% 이상 구성
 - ※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기획처 추천 경제·재정전문가도 분과별 1명씩 배정
- **(중립성)** 사업별 교차평가제(부처 추천 위원 50% 이하 배정), 제척기준 및 회피제도 운영을 통해 평가의 공정성 담보

(2) 사업평가 지표 개선 : 정성·절대평가 중심 전환

○ (사업평가) 사업유형과 사업연차를 고려한 정성·절대평가 강화

※ 예 : 사업계획·사업관리*(30%) + 성과달성도·질적우수성(70%)

* 집행 적정성(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계획(KOSBIR) 달성 등), 추진 체계 적정성, 개선 노력 등

- 사업별 대표성과(5건 이내) 등 핵심 평가지표를 최소한으로 설계

<질적 우수성 중심 평가 방향>

■ 사업 목표에 맞는 대표성과 제출

- (과학연구) 논문·특허 편수 등 단순 정량지표보다, 인용횟수, 해외 언론 소개, 학계 평가 등 학문적 파급력 중심

- (기술개발) 경제적·기술적 파급효과 등을 다양하게 고려

(예) 경제적 성과 : 기술판매, 창업, 매출 등

기술적 성과 : 기술검증, 시제품 제작, 문제해결 정도

인프라 구축 : 관련 생태계 조성, 데이터셋, 지역산업 확산 정도

사회적·공공적 가치 : 재난안전, 감염병, 지역소멸 등 문제해결과 사회적 비용 절감 정도

■ 시기상 성과창출 이전의 연구, 도전적 연구, 정책적 중요성·필요성 높은 연구의 경우 사업 추진 경과 및 향후 창출될 성과 등을 종합 고려

○ (이행점검) 기존 평가의견에 대한 이행실적 + 사업 성과관리 점검 등 후속조치 내실화(이행/부분이행/미이행 여부)

(3) 평가결과 환류 강화 : 예산 배분·사업 개선 반영

○ (평가결과) 평가등급 세분화(3등급 → 5등급)와 함께, 사업별 개선방향 의견 도출

※ (절차) 통합평가단 운영 → 과기자문회의 보고·확정 → 통합재정사업평가위 보고, 국회 제출

<R&D 통합사업평가 결과부여 개선 방향>

<(기존) 3등급>

평가등급
우수
보통
미흡

→

<(개선) 5등급>

평가등급 (배점)
S (95~100점)
A (85~94점)
B (75~84점)
C (65~74점)
D (65점 미만)

+

효율화 의견
· 성과 우수
· 정상 추진
· 사업 개선·개편
· 사업 구조조정

○ (사업평가의 예산 환류) 평가 결과에 따른 관계부처 대상 인센티브 강화

※ 연구자 대상 인센티브 등은 사업평가와 무관하게 과제평가에 기반하여 지급

- (S·A 등급) ▲우수사업(과제) 예산 증액, ▲차년도 이행점검 면제 등 인센티브 제공, ▲부처 신규·후속연계 사업(과제) 규모 확대 등 검토

- (C·D 등급 / 이행점검 미이행) 차년도 예산심의시 반영 실질화

〈중점과제3〉 대학 일류R&D 체질개선 [주관 : 과기정통부·교육부]

기존 ‘개별 과제 중심 지원’ 위주에서 안정적·지속적 기관 지원을 더해
기관 차원의 연구 역량을 축적하는 연구중심대학 도약 촉진

As-is	→	To-be
▶ 교수 개인 연구실 중심 연구 ▶ 교원-대학원생 중심 연구인력 구조 ▶ 개인 과제 종료시 고용 불안정 ▶ 장비 활용 부족, 관리 사각지대		▶ 다양한 연구인력 구조, 장기·안정적 고용 ▶ 중장기 연구전략 + 기초학문 연구 강화 - 블록펀딩형 신규사업 추진, 법적 토대 강화 ▶ 대학 공동기기원 중심 시설·장비 공동활용 거점화

(1) 연구중심대학 도약을 위한 블록펀딩 지원('27년 신규사업)

- 과기정통부·교육부의 역할분담을 통해 연구중심대학 기반구축 사업을 공동추진하고, 부처간 정책협의회 등 상시 소통·협업 강화
- **과기정통부** 교원 - 전임연구원 - Staff-Scientist(장비테크니션) - 기획·지원인력 등 선진국형 협업 구조 전환을 위해 인력·장비 등 연구기반 구축 지원
 - '27년^{정부안} 총 120억원 지원 : 3개 대학, 평균 40억원('28년(안)~ : 80억원)

<과기정통부 연구기반 블록펀딩 지원대상 및 핵심방향>

① 연구전문인력 고용	+	② 시설·장비 구축
■ 전임연구원·Post-Doc 등 연구인력 ■ 장비테크니션 등 연구지원인력		■ 공동연구시설·장비 ■ 데이터 관리 등 연구지원 플랫폼

→ 대학별로 현황 및 중장기 발전 전략 등을 고려하여 인력장비 배치 전략 수립, 자율 투자
→ 다양한 연구인력의 직군·처우를 대학이 자체 설계·제도화하여 안정적 연구일자리 창출

- **교육부** 기초학문·인문사회 분야를 비롯한 연구기반의 장기적·안정적 강화 및 대학원생 등 학문후속세대 연구공백 완화
 - '27년^{정부안/비R&D} 총 300억원 지원 : 10개 대학, 평균 30억원 ('28년(안)~ : 60억원)

<교육부 연구기반 블록펀딩 지원대상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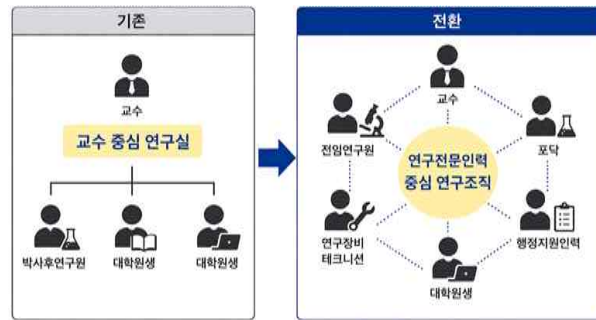
① 기초학문 연구비	+	② 인건비	+	③ 중장기 재원
■ 신진교원 대상 기본연구비		■ 대학원생, Post-doc 등 학문후속세대 인건비		■ 학문자율펀드 (중장기 연구장비 등)

(2) 연구기반 확충 지원 법적 토대 마련

- **(단기)** 「기초연구진흥법」 개정(제8조)을 통해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기반 확충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 마련

※ (개정안) 기초연구 역량강화를 위한 연구시설·장비 구축, 정보 인프라, 정규직 인력 확충 등 지원 근거 신설

- 교원/학생 이원화 구조를 넘어, 전임연구원, 장비 지원인력 등 지속가능한 연구생태계를 위한 **인력구조 확장** 추진



※ (예 : 영국 케임브리지대 MRC 분자생물학연구소) 총 600여명 중 그룹 리더(교수급) 54명, 박사급 연구원 약 370명, 연구지원인력 약 160명(장비 운용 및 행정 지원 등)

→ 연구책임자 : 박사급 연구인력 = 1 : 6.9 / 연구책임자 : 연구지원인력 = 1 : 3

- **(중장기)** 「고등교육법」 내 전문인력 지위 관련 조항 신설 검토 (박사후연구원 등)

◆ 대학 연구기반 확충 및 산업연계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·현장 협의 지속 추진

※ (예) ▲대학 연구역량·인프라 축적 및 첨단과학 육성을 위한 연구비 지원제도 개선,
 ▲첨단분야·중소기업 등 산학협력 및 산업계 연구자 성장경로 확대((가칭)산업학위제 등)
 ▲국립대병원 역량강화 등

(3) 대학 연구시설·장비 공동활용 촉진

- **(통합관리체계)** 공동기기원·공동실험실습관을 연구시설·장비 공동 활용의 핵심으로 재편, 대학 단위 공동활용 통합 지원체제로 확장
- 중·장기적으로 거점 대학의 연구인프라를 인근 대학에 개방하여 지역 내 연구장비 양극화 해소 및 대학 간 융합연구 촉진
- **(유휴장비 활용 제고)** 학내 개별 연구실 장비의 현장 전수조사(2년 단위)를 통해 유휴·저활용 장비의 관리·현행화 강화
- 「국가연구시설·장비 관리·활용법」 제정 추진 등 효과적 활용 토대 마련

〈중점과제4〉 민간 성과확산 고속도로 [주관 : 산업부·중기부]

사업화 성과 정체 극복을 위해 부처별 분절화된 사업화 지원 역량 결집,
기술개발(공급)-기업활용(수요)간 거리 최소화

As-is	To-be
▶ 사업화R&D 성과단절, 시장지향성 부족 ▶ 기술거래 정보 파편화, 활용성 저하 ▶ 기업R&D 투자성과의 공유·환류 부족 ▶ 혁신기술의 마중물 수요 확보 필요	➔ ▶ 범부처 협력, 단계형 지원 등 성과 연속성 강화 ▶ 실증, 납품 등 돈이 되는 R&D 기획 ▶ AI 기반 국가 기술거래·매칭, 지역 네트워크 등 성과 교류·환류 ▶ 회수·재투자가 가능한 투자형R&D 도입·확산 ▶ 혁신기술 특화형 국가계약제도 도입

(1) 범부처 사업화·확산 패스트트랙 도입

- **(기술사업화 연계체계)** 산업·중기·과기·조달청 등 기술사업화 R&D 사업 관련 부처가 함께 연구성과 이관, 역할분담, 구매처 확보 등 상설협의체 운영
 - 범부처 패스트트랙 협업사업 공동 기획 및 예산·절차 협의
 - ※ (예) 일몰 중 우수성과 과제의 타부처 이관 → 사업화 트랙 신설, 범부처 공동재원 마련, 범부처 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계획(KOSBIR) 제도를 활용한 성과관리
 - 산업부기술·제품·소재, 중기부창업·기업성장 등 R&D 사업화 역할분담, 범부처 프로그램형 예산사업 등 사업화 도달 추적·실적관리 지원
 - 관계부처 펀드·보증* 및 민간 기술투자와의 연계도 강화
 - * 사업화 프로젝트·유동화 보증(R&D 성과의 미래 사업화가치 평가) : '26년 3,400억원 규모
- **(사업화 R&D 성과기준 명확화)** 선정평가 단계부터 시장수요의 지속가능성, 최종 산출물 계획 고려 등 Market-Pull 중심으로 표준 KPI 도입 추진
 - ※ (예) '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성과지표' 개정시 사업화 관련 지표 개선(산업부·중기부 참여)
 - 사업화 가능성을 고려한 경쟁형 단계평가(Stage-Gate) R&D 확대, 시장성 있는 과제를 선별해 사업화·제품개발 연속 지원(R&BD, R&PD)
 - ※ (산업부) ^(현행) 산업기술 알키미스트, 미래 판기술 등에만 경쟁형 단계평가 부분 적용
→ ^(개선) 우수기업연구소(GATC), 차세대연구자 R&D 등 자유공모형에 확대
 - ※ (중기부) 한국형 STTR : ^(1단계) 사전검증(2배수) → ^(2단계) R&D지원 → ^(3단계) 사업화연계

(2) 시장가치를 반영한 '돈이 되는 R&D' 기획

- **(상용화 가능성 반영)** 사업화 R&D의 경우 과제 선정 단계부터 시제품 출시 시점, 시장경쟁력 등 기술성숙도에 대한 검증 강화
 - ※ (예) (현행) 최종 기술 스펙만 제시 → (개편) 사용처, 수요기관 제시 의무화
 - ↳ 예: 1,000°C에서도 변형되지 않는 고내열성 소재 → 극한환경 우주복, 정부·H사 등에 '28년 납품
 - 시장성 검증을 위해 VC 등 기술사업화 기관의 과제 선정평가 참여 확대
 - 출연연-중소벤처기업간 교류·협력을 통한 연구성과의 공동 고도화 촉진
 - ※ 중소벤처기업-대학·출연연간 멤버십 기반 산학협동프로그램 시범 추진
- **(실증·납품 연계)** R&D 후 생산·납품이 명확한 과제는 실증과 해외인증 비용 등을 패키지로 지원
 - ※ 글로벌 기업 납품·기술이전 계약의향서 제출시 기술고도화·실증비용을 지원하는 국제협력 전략형 R&D 확대
 - 최종 수요자인 앵커 대기업이 목표 기술을 직접 제시하고, 중소·중견 기업과 R&D 및 실증을 함께하는 '함께성장 프로젝트' 추진

(3) 기술사업화 성과 교류·환류 강화

- **(기술거래 플랫폼)** 부처별 개별 플랫폼*의 데이터 체계를 연동, 국가 기술거래, AI 기반 공급-수요 매칭 및 추천 강화
 - * 국가기술은행·NTB(산업부), 스마트테크브릿지(중기부), 국방기술거래장터(방사청), IP-Market(지재처) 등
 - API 실시간 연동체계를 구축하고 기술중개·금융·정책사업 등 연계지원 확대
- **(권역별 Tech-hub)** 4극 3특 권역별 기술사업화 총괄기관을 지정, 지역 연구·혁신기관 네트워크를 활용한 시너지 창출
 - R&D 과제기획(전단)을 담당하는 PD에 더해, R&D 종료 후 사업화 병목 해결(후단)을 밀착 지원하는 산업기술마스터 도입·배치
 - ※ 지역별 사업화전문가 육성·배치 → 기술발굴·기업제공 및 기술사업화기관 연계
- **(조사분석 강화)** 대학, 공공연 보유기술에 한정된 '기술이전·사업화 실태조사(주관 : KIAT)'를 민간으로 시범적 확대('27~)
 - ※ 공공기술을 이전받거나 도입(실시)한 민간기업 표본조사부터 단계적으로 추진

(4) 혁신본부 등기업R&D 성과의 회수·재투자를 위한 투자형 R&D 본격 도입

- (법·제도 정비) 투자형 R&D사업 추진 근거 마련 등을 위해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개정(~12월), 기업 행정부담을 완화하는 관리체계* 마련

* 투자형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및 운영 매뉴얼 수립 등

- (투자형 R&D 확대) 전략기술 분야* 등 민관합작 투자형 R&D사업(SPC 등)을 지속적으로 확대*하고, 후속지원을 위한 협업체계 운영 검토

* 첨단바이오, 양자, SMR 등 투자형 R&D에 적합한 프로젝트 발굴·기획 추진

※ '27년 시범사업 : 과기정통부·중기부 4건, 1,093억원(정부안)

(5) 재경부 등혁신기술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체계 개편

- (계약체계 혁신) R&D 협약 - 구매계약 연계(법상 국가전략기술* 대상 등), 조달계약 이행방식 유연화('경쟁적 대화') 등 본격 추진

* 국가전략기술육성법, 국가첨단전략산업법, 소부장특별법 등 : 소관 중앙관서의 장 신청
→ 재경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의결

- 연구개발 단계에서 이미 실질적 경쟁(예 : 공모 선정)을 거친 경우, 후속 성과물 구매 단계에서도 국가계약법상 경쟁요건 충족 간주

※ 사업 최초 공고시 '성공하면 후속 구매를 할 수 있다'는 내용·요건·범위 등 포함

→ 개발성공 기준, 구매범위, 기간을 사전확정하고 구체적인 물량·단가는 추후 확정

- (R&D 연계) R&D와 구매계약을 잇는 부처합동 조달연계 사업 기획 추진

- 기존사업 종료과제 중에서도 공공수요 연결 발굴, 수요부처 피칭 등 계약 지원

Ⅲ. 주요 실행계획

R&D 체질 강화 및 생태계 활력을 목표로,
관계부처·중점과제간 연계 및 입법과제 신속 지원·추진

1 정부R&D 투자전략 포트폴리오

- 부처별 사업기획 및 총괄관리 공통 기준인 5개년 중장기 투자전략을 기초로 한 포트폴리오형 R&D 투자 정착
 - (관계부처 전략수립) 부처별 투자 우선순위, 대형 연구형R&D 사업계획서('26.10.), 중기사업계획서 및 연간 투자전략 시행계획('27.1.) 제출
 - (동태적 관리) 마일스톤 달성 등을 고려한 Rolling-Plan형 '중장기 투자전략 시행계획' 마련('27.3.)

2 성과창출형 평가체계

- (입법) 「연구성과평가법」 개정을 통한 R&D사업 통합평가 근거 마련
→ 하위법령 정비(~'26.12.)
- (정책·플랫폼) 평가실시계획 수립 및 과기자문회의 의결 →
평가편람 배포('26.12.) → ^{가칭}통합평가위원단 출범('27.1.)
 - 결과 도출(3월) → 이의신청 및 조정(~5월) → 차년도 R&D 예산심의 반영

3 대학 일류R&D 체질개선

- (입법) 「기초연구진흥법」 개정 지원(~'26.12)
- (예산) 「연구중심대학 기반구축」 사업 예산 확정 및 시행계획 마련(~'26.12)
- (정책·플랫폼) 대학R&D 체질개선을 위한 대학현장 및 부처 의견수렴 지속 추진

4 민간 성과확산 고속도로

- (입법) 기술사업화 관계부처 협력 및 혁신제도 도입 신속 추진·지원
 - 범부처 기술사업화 상설협의체 실질화 근거* 마련
 - * 예 : 「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」 개정 등
 - 투자형 R&D 제도화를 위한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개정('26.12.),
 - 혁신기술형 국가계약체계 개편을 위한 「국가계약법」 및 관계 하위법령 정비('26.12.)
- (예산) 산업기술 마스터 등 지역 중소기업 사업화 밀착지원 사업 추진

비
전**과학기술 N·E·X·T 투자로 대체불가 대한민국 실현**

“이재명 정부 「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」 구현을 위한 5년간 R&D 포트폴리오”

목
표

투입	5년간 정부R&D 200조원 이상 투자
산출	세계 최상위급 AI 모델 개발, 세계 최고 피지컬AI 역량 확보, 반도체 제조 세계1위 유지, 첫 상용 SMR 건설('35)
성과	AI 3대 강국 도약,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

○ **<Nexus> AI·보안 및 3대 메가프로젝트 중심 주력기술 초격차 실현**

- (AI) AI모델, 피지컬AI, AIDC 솔루션 개발 등 추진 ('27년 4.11조원)
 - * (과학기술 AX) 연구데이터 통합, AI 특화 연구도구 및 자율실험실 확산
 - ⇒ ('30년) **피지컬 AI 글로벌 1강** 달성, **AIDC 수출산업화**, **AI글로벌 3위**(現 5위)
- (차세대보안·네트워크) AI 안전·신뢰 고도화, 초성능·초지능 구축 ('27년 0.69조원)
 - ⇒ ('30년) **양자암호체계** 구축, **6G 세계 1등** 국가 달성
- (반도체·디스플레이) 차세대반도체*, AI 반도체 풀패키지 개발 ('27년 1.31조원)
 - * 극미세·적층형, 뉴로모픽, 화합물 반도체, 국방반도체 등
 - ⇒ ('30년) **반도체 제조(메모리+파운드리) 1위**, 반도체 **소부장 국산화 50%**(現 30%)
- (첨단로봇·모빌리티) 로봇AI FM, 핵심 5대부품 국산화 추진 ('27년 1.08조원)
 - ⇒ ('30년) **자율주행차 3대 강국**, **로봇 부품 국산화율 80%**(現 41%)
- (차세대전지) 차세대전지 초격차, 재활용·재사용 기술 ('27년 1.08조원)
 - ⇒ ('30년) **글로벌 시장 점유율 25%**(現 19%)

○ **<Enforce> 7대 SEED 기반 첨단기술 집중 육성**

- (차세대 프론티어) 기술적·물리적 한계 극복 기술 확보
 - ▶ (①첨단·그린바이오) BCI, 세포·유전자 치료, 식품·건강 소재 ('27년 2.20조원)
 - ⇒ ('30년) **블록버스터 신약 3개** 개발

▶ (②양자) 양자컴퓨터 개발, 양자팍 구축 및 소부장 내재화 (‘27년 0.37조원)

⇒ (‘30년) **풀스택 양자컴퓨터 2종 개발**

▶ (③우주·항공·해양) 발사체 신뢰성·경제성 확보, 달착륙선 개발 (‘27년 2.05조원)

⇒ (‘30년) **국내 최초 민간주도 달착륙, 우주항공 세계시장 1.7%(現 0.7%)**

- (미래 청정에너지) ④태양광, ⑤핵융합, ⑥차세대 SMR 기술개발 및 실증, 지능형 전력망, 고압직류송배전(HVDC) 등 핵심기술 상용화 (‘27년 2.98조원)

⇒ (‘30년) **미래-재생에너지 핵심기술 상용화,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(40% 감축) 달성**

- (⑦첨단 공급망) 고부가친환경 및 극한소재 개발 (‘27년 2.44조원)

⇒ (‘30년) **희토류 대체·저감·재활용 촉진, 첨단소재 기술수준 92%(現 85%)**

○ **⟨expand⟩** 과학기술 생태계 강화·확장

- (기초연구) 대학 블록펀딩 도입, 정부 R&D 대비 안정적·지속적 투자(‘27년 3.56조원)

⇒ (‘30년) **HCR(상위 1% 연구자수) 세계 Top10(54→100명)**

- (출연연) 국가임무 중심 전략연구 등 추진 (‘27년 4.78조원)

⇒ (‘30년) **국가연구 거점 조성, 세계 100위 연구기관 5개(現 2개)**

- (지역R&D) 지역 자율형 R&D 확대, 인재-R&D-산업 선순환 구축 (‘27년 4.48조원)

⇒ (‘30년) **수도권 대비 혁신역량 70% 수준(現 44%), 지역 딥테크 창업 350개**

- (중소벤처) 투자형 R&D 등 투자·회수·재투자 방식 확대 (‘27년 4.19조원)

⇒ (‘30년) **유니콘 기업 50개(現 27개)**

○ **⟨Trust⟩** 국민 삶에 체감되는 R&D

- (재난안전) 임무·상황에 따른 피지컬 AI 개발·실증 (‘27년 2.67조원)

⇒ (‘30년) **재난안전 R&D의 성과 활용률 45%(現 35%)**

- (국민체감) 과학기술을 돌봄·의료·문화·식품·주거·환경 접목

⇒ (‘30년) **사회문제 해결 R&D 실증체계 만족도 90%(現 70%)**

- R&D 성과평가는 예산의 집행 주체·단위에 따라 ①**사업평가***(혁신본부 → 수행부처), ②**과제평가****(수행부처 → 연구자)로 구분

* 「과학기술기본법」·「연구성과평가법」에 따라 부처의 R&D 사업 성과 평가

**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에 따라 R&D 과제의 수행 과정·결과를 평가

※ 정부출연연구기관·부처직할연구기관 대상 ‘기관평가’ 별도 시행

- 국민주권정부는 연구자가 성공·실패에 매몰되지 않고 혁신적 연구에 도전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높이고, 우수성과는 연계되는 방향으로 **과제평가 개선 완료**

※ 제6차 과학기술기본계획(’26~’30): 평가등급제 폐지, 후속과제 연계 강화, 실패데이터 축적·확산 등 →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및 시행령 개정

- 이러한 평가 개선 기조를 **사업평가로 확장**하여, **현장의 평가 부담은 덜고 평가 결과는 실질적인 환류**로 이어지는 체계 구축

※ 일반사업도 기존 ‘부처 자체평가 → 기획처 상위점검’ 이원화 구조를 객관성·실효성 확보를 위한 기획처 주관 통합평가로 개편 완료, ’26년부터 기시행중(「국가재정법」)

- 사업 개선과 함께 “**파급력 높은 우수성과 창출을 유도**”하여 확대된 R&D 투자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확산되도록 뒷받침

〈R&D 평가체계 전체 흐름도 및 개선방향〉

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
과학기술정책국 과학기술정책과

담당자	노명종 사무관
연락처	전 화 : 044-202-6724 E-mail : lovew1ns@korea.kr